

“어머니 뜻 받들어 ‘민주유공자법’ 반드시 제정”

이한열 열사 어머니 고(故) 배은심 여사 1주기 추모제 민주 광주시당도 추모 성명 “책임지고 유훈 지키겠다”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었던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의 1주기 추모제가 광주에서 열렸다. 추모객들은 배 여사가 떠나며 남긴 ‘민주유공자법 완성’이라는 숙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이한열기념사업회, 광주전남추모연대는 9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망월공원묘역에서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1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유족을 비롯해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 한동건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추모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장 협회회장의 인사말과 한 이사장 등의 추모사 순서로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생전 배 여사가 민주유공자법 제정 최전선에 나서며 투쟁했던 모습과 넉넉하게 웃어보이던 미소 등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열사의 연세대 동문인 정찬경 성악가가 배 여사를 기리며 가곡 ‘기러기’를 부를 때는 참아온 눈물을 터트리기도 했다. 추모객들은 ‘민주유공자법 완성’이 머지않았다며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 이사장은 “배 어머니는 유명을 달리하기 전까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회장으로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헌신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용기를 북돋아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된 도리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남기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며 “어머니가 남기신 유자인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 하늘에서라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협회회장은 “끼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투쟁했던 열사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사회 가치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 열사의 민주국민당 당시 집행위원을 맡았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이 열사 추모식 당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했지만 정무위원회 내 소위원회에 상정하는데 그쳐 송구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이 법을 완성해 배 어머니의 유훈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추모사하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망월공원묘지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의 주역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의 1주기 추모제 도중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스

北무인기 인지 90분뒤 대비태세 軍 “사안 확인...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북한 무인기 침투 대비태세인 ‘두루미’가 침투 약 1시간30분 후에 발령된 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9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비행금지구역(P-73) 공역을 지나간 일은 긴급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두루미 지연 발령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루미는 지정된 권한을 가진 분이 발령하게 돼 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항공기나 무인기가 접근할 때는 경고방송, 경고사격, 격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무인기는 수도권에서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이 필요 없이 바로 격추할 수 있는 항공기”라며 “(군의 대응) 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대북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는 공군의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서 발령한다. 다만 두루미 발령 권한이 공작사에만 있는 지 여부는 보안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부터 해당 항공을 식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1군단에 적시에 전달했는지 여부, 두루미 발령을 늦게 실시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합참의 준비태세 검열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

대통령 감찰조사팀 신설 사이버사령부, 또 이전

“내부 조정 통해 협조”

대통령실 내 감찰조사팀 신설로군의 사이버사령부가 또다시 이전하게 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영외 위치한 정보체계 교육시설에 여유공간이 중요하다. 그 건물내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대의 이전과는 상관없다. 이전 교육시설이다. 교육시설 내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조정을 통해서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사령부는 대통령실 감찰조사팀 신설로 인해 이번 정권에서만 2차례 이사를 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지난해 초까지 국방부 별관을 사용했던 사이버사령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기 과천시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이버센터 등으로 분산 배치된 바 있다. 당시 야권은 “군을 향한 사이버공격이 하루 평균 26차례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이버사 분산 배치로 인보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감찰조사팀은 국방부 직할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정보체계단 건물 일부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체계단 건물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함께 사용하는 부지 후분 밖 인근에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사이버사에 공간 마련을 요청했고, 정보체계단 건물 1층 일부를 조사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당대표 출마 “尹과 운명공동체”

“수도권 70석 확보해야...尹 실패하면 제 정치적 미래 없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장을 지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수도권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이다. 아니,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 ▲중도·2030·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대표 ▲공정한 공천할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인에게 임박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170석 압승을 위해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변화를 원하는. 어느 당대표가 변화를 더 많이 바라는지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헌신적인가 그런 4가지 정도 기준이 그분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

민주, 이재명 성남FC 의혹 “적법광고, 뇌물 후원금 해석”

“프로스포츠 피해, 기업 활동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하루 전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반박하는 자리를 만들어 사건에 대해 “프로스포츠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특별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구단을 정치 탄압 무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만들어지면 어느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 어느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FC와 기업은 적법한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지급했다”며 “실제로 많은 시민 구단이 지역연고 기업을 대상으로 영입해 광고를 유지하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법 광고를 뇌물성 후원

금으로 해석한다면 대다수 프로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기업 자유를 운운하고 친기업 정부를 표방할 자격이 있다”고 규탄했다. 또 “당시 기업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할 이유는 충분했다”며 “2007년 성남 일화 시절 노출 효과가 915억3477만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2015~2016년 기준 성남FC는 시민 구단 중 광고수 1위였다”고 했다. 더불어 “로그 등이 광고된 유니폼은 2015년 기준 홈 및 원정 경기에서 31만4750명의 관중에게 노출됐고 중계방송과 보도로 인한 광고 효과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FC는 2015년 롤링주빌리라는 한국 최초 사회공헌형 광고를 선택했다”며 “생계형 채무

자들이 빚을 갚고 새 삶을 살아가실 있도록 돕은 프로젝트에 동참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관중 수도 많고 홍보 효과 높으며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까지 가능한 시민 구단 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전입문제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는 모두 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저희는 이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대선거구제’ 진보당 전남도당, 도입 촉구

진보당 전남도당의 22대 총선 후보 4명이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역별 대선거구제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황제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이철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당위원장, 나주·화순 안주용 진보당 나주시당위원장, 여수 을 여찬 청년진보당 전남도당 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며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이 일치되지 않아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득표권 보수 양당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방안으로 결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득표 권의 권력 유지와 야당의 정권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을 제안한다”며 “현행처럼 지역구에서 후보에게만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를 모두 짚을 수 있도록 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를 먼저 확정된 후 각 정당의 당선지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의 선례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3분기 4대 지주는 행정 이자 수익을 무려 23조 7757억 원을 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며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은행들은 역대 최고의 이자와 티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興 긴급 현안질문 반대에 “국회의장 결단하면 개최 가능”

“국민의힘 의지 있으면 언제든 합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안보, 경제 분야 긴급 현안질문 요구와 관련해 “오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결단해 의결하면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북한 무인기 침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현안”이라며 긴급 현안질문에 대해 “국민의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합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합의가 도출되면 내일이나 수요일 본회의를 열어 실시하면 된다”면서도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 결단을 통한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끝내 오늘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하요일 본회의를 열어 실시 여부를 물어보고 그 표결을 통해 실시하도록 의결하면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틀에 걸쳐 하기 어렵다면 11일에 안보, 경제 분야 두 번의 긴급 현안질문을 오전, 오후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 출석은 당연한 책무”라며 “긴급 현안질문은 대정부 질문과 달리 미리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의 건 의결을 안 해도 되고, 질문 요지를 미리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더불어 “이 모든 조건을 뒤로 하더라도 긴급 현안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의힘 참여, 국회의장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뉴스

